SOCIETY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광주 시내버스 노사 '평행선'…이번 주도 넘기나

노조, 가장 낮은 수준 요구 vs 사측, 직접협의 우선

시 "임금·물가 상승률 등 근거 3% 수준 인상 적절"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1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버스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 개최 통보를 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했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또 "사용자는 교섭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 없다"며 "배짱 교섭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 노조는 "광주 노동자들에게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마을버스 중복노선 허용과 무분별한 무료 환승 확대 등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운전원 인건비는 필수 비용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주체인 광주시도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노조를 비판했다.

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준법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은 "교섭 거부가 아니라 노동청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사후조정 절차로 넘어간 상황이다. 사후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대화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면서 "노사 간 직접 협의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 시의회 등이 제시한 3% 인상안은 수용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8.2% 인상 요구를 접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준법투쟁 방식으로 전환해야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3%)과 물가 상승률(1.9~2%) 등을 종합해 3%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버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18일부터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구간은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배차 간격이 길고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다.

이에 따라 순환01, 수완03, 매월06, 진월17, 송정19, 매월26, 일곡28, 첨단30, 송암31, 봉선37, 일곡38, 문흥39, 금호46, 송암47 등 총 14개 노선에 42대의 전세버스가 지원된다.

시는 추가 전세버스 투입으로 출퇴근시간대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은 43분(기존 평균)→21분, 퇴근시간 배차간격은 48분(기존 평균)→25분 등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에는 공무원이 동승해 정류소 도착 안내, 탑승객 승하차 등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지원한다.

향후 시는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최대 100대 이상의 대체 차량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세버스는 긴급 도입된 차량으로,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불편을 겪는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9월 3일 수능 모의고사 적정 난이도 유지한다

올해 두 번째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오는 9월 3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9월 모의평가 역시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접수 기간은 6월20일~7월2일이고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성적 통지표 배부일은 9월30일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서구, 주민 주도로 '무장애 도시' 조성

광주 서구가 주민 주도형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서구는 17일 '제2기 무장애 도시 구민참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장애 도시 구민참여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요소들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 조직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구민참여단 활동과 관련한 기본교육을 마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무장애 도시를 위한 실태 조사와 정책 제안, 모니터링 등을 펼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무장애 도시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본 가치다"며 "구민참여단과 함께 생활 현장 속에서 불편한 부분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무장애 도시 서구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17일 오후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서구 무장애 도시 구민참여단 발대식'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북구, 기본사회 주거모델 '사회주택' 조성한다

LH 광주전남본부와 청년·노인 주거공간 제공

광주 북구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발맞춰 기본사회의 주거공급모델인 '사회주택' 조성에 나선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18일 '광주 북구형 사회주택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조성될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사회주택 조성사업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부담 없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북구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협업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

사회주택 공급은 2027년 말까지 3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156세대 규모의 청년 도약 주택 2개소를 용봉동 127-3번지(60세대)와 1372-1번지(96세대) 일대에 조성하고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 주택' 1개소를 구축한다.

특히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신축매입임대 거점화'에 맞춰 지자체와 LH의 협업 모델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신축매입임대 거점화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서 기존 주거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북구는 사회주택 공급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어르신 돌봄 문제 해결은 물론 커뮤니티 활성화로 공동체에 활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며 "LH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회주택 추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 조성되는 첫 사회주택인 '청년 도약 주택 1호'는 오는 10월 준공된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북구에서 보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왜 경찰에 신고해" 보복 폭행한 상습범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협박한 상습 폭력범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2시20분 목포시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35)의 자택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유리창 등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사귀게 된 B씨가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주점 철제 의자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이를 주점 업주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분리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폭행·욕설을 하거나 현행범 체포 이후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응급실 직원들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200만원을 공탁했지만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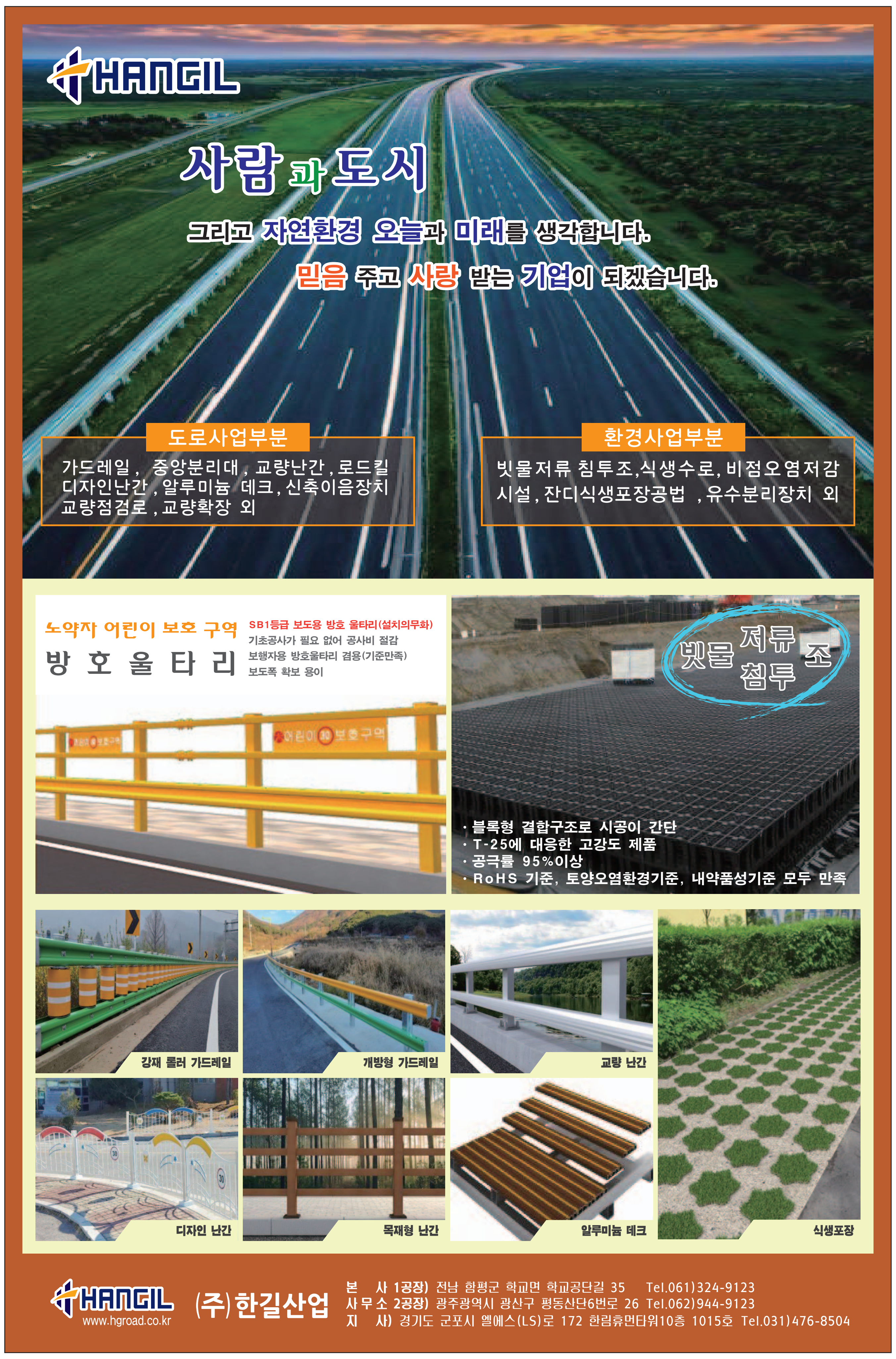
동구, 통합건강센터 설치

보건의료 종합서비스 제공

광주 동구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건강센터가 조성된다.

1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보건소와 산수2동 마을사랑채(호랑꼬두메 행복나눔센터), 동구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총 3곳에 '동구 통합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동구 통합건강센터는 주민에게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됐다.

특히 1대 1 맞춤형 건강관리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건강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